

## 1989년 파리 G-7 정상회의와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 이 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1989년 여름의 G-7 정상회의와 유럽의 희망

1989년 여름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기 시작할 무렵 파리의 G-7 정상회의에 모인 세계의 지도자들은 한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당시 헝가리와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의 물결을 지지하기 위해 G-24 국가들로 하여금 동유럽의 경제발전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이러한 지원을 서유럽의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가 총괄하여 조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들 지도자들은 당시 동유럽의 변화가 서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는 역사적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진보를 뒤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유럽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들의 인식과 의지를 토대로 이후 동유럽은 세계의 경제적 지원과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특별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서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마셜플랜과 같은 대대적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이제는 서유럽의 주도로 동유럽에서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나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사회주의 체제에 길들여진 동유럽 경제로 빠르게 서유럽의 자금과 물자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중심국가들에 지원된 서유럽 및 세계의 경제지원은 당초 약속한 금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유럽에서는 서유럽과 세계의 지원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세계의 지원을 받아 들이기 위한 동유럽의 개혁과 노력은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과 비판이 새로운 유럽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정도는 아니었다. 동유럽에는 서유럽과 세계의 지원을 받아내야만 하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고, 서유럽에는 새롭게 친구가 된 동유럽과 더불어 발전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기대감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막을 내린 동유럽의 도시들은 ‘곧 있으면 런던과 파리의 고급 백화점에 즐비한 형형색색의 명품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넘치는 곳이 아니었다. 거리의 곳곳에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넘쳐나고, 사회주의 시절의 보조금이 삭감되어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배회하며, 솟구치는 물가로 상점 안의 물건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주부들의 절망이 확산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절망을 이겨내고 새롭게 생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서유럽과 세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야만 하는 절박함이 배어 있는 곳이 바로 동유럽이었던 것이다. 동유럽을 바라보는 서유럽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았다. 어떤 이탈리아의 외무장관이 고백하듯 ‘언제든 넘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을 등뒤에 두고’ 서유럽 홀로 풍요롭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

지 않은 일이었다. 오히려 과거 유럽의 문명을 공유했던 이들을 발전시켜 정체에 빠진 서유럽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었다. 바로 이러한 서유럽의 기대감과 동유럽의 절실함이 1989년 파리 G-7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동서유럽의 경제협력을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살려내 전진시킨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현재 새로운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과거 적대국이었던 동유럽의 국가들은 이제 EU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서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서유럽으로서는 바로 곁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동맹자를 얻은 셈이다. 어느덧 부다페스트와 프라하는 유럽인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이들 도시에는 벤츠와 볼보, 그리고 시트로엥의 입간판이 즐비하다. 싸고 질 좋기로 소문난 바르샤바의 성형외과 문을 두드리는 독일인 모녀의 모습도 이제는 흔한 것이 되었다. 가난한 주위의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된 동서유럽의 경제협력이 어느새 그 소기의 목적을 뛰어넘어 서유럽의 삶의 질 역시 높이고 풍부하게 만든 것이다.

## 2007년 가을 남북정상회담은 어떤 희망을 담고 있을까?

1989년 파리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17년이 지난 올해 가을, 파리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1989년의 파리 회의와 이번의 정상회담은 그 세월의 간극만큼이나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와 북한경제를 관찰해 온 외부 연구자의 눈에는 왜 이 두 회의가 자꾸만 오버-랩(overlap)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두 회의가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을 만큼 서로가 닮은 점 역시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커다란 의제 두 가지는 ‘평화’와 ‘경제(남북협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를 만들어 낸 근본적인 동인은 남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이다. 그간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위협했던 북한의 핵문제가 6자 회담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이를 계기로 오랜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수교를 서로 입에 올릴 만큼 우호적으로 변한 것이다. 과거 파리에 모인 세계의 정상들이 동유럽의 새로운 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진보라고 인식하고, 이의 전진을 위해 동유럽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한 것이나, 현재 우리가 북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계기로 인식하고, 이를 공고히 하고자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려 하는 것은 서로가 닮은 꼴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남북한 정상이 마주 앉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중대 경협사안이 올라 갈 것이며, 이러한 경협사안은 북한경제의 복구와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사안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의 G-7 회의가 이후의 G-24 국가에 의한 대대적인 동유럽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구체화된 것처럼, 이번의 남북정상회담 역시 비록 다자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한국에 의한 적극적 북한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남북경협 역시 과거 서유럽을 비롯한 G-24의 동유럽 경제지원의 초기에서와 같은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차기의 (한국)정부에 부담을 주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또한 북한은 그간의 남북경협 과정에서 경협의 속도가 느리고 한국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경협사업

들이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북한으로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정상회담이, 과거 파리 G-7 정상회의와 그에 뒤이은 G-24 국가들의 동유럽 경제지원에서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역사의 상상력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 넘는다. 과거의 사례가 그대로 현실에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이 향후의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과거 서유럽의 경제적 지원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동유럽의 '절실함'과 서유럽의 '기대감'이 남북한 사이에도 유사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들은 그간 북한당국이 두 가지의 심각한 체제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정치군사적 위협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 내부의 경제피폐라는 경제적 위협이다. 전자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북한은 핵 문제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핵 문제는 상당부분 북한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한은 후자의 위협을 극복하려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자금과 물자가 대규모로 북한에 유입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북한에게 이러한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 별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라는 별도의 후원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북한체제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모르겠지만,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대규모의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데에는 소극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이는 결국 북한이 한국과의 경협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과거 동유럽이 서유럽의 경제지원을 바라볼 때와 같은 '절실함'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우리국민은 북한을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 방치하면서 남북한의 교류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로 인해 가능한 남북경협이 빠르게 발전해 북한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 서유럽이 동유럽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기대감'이나 '의무감'이 북한을 바라보는 현재의 한국 시각에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던 양측의 절실함과 기대감이라는 요소가 현재의 남북관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파악해도 크게 틀린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어려운 점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과거 서유럽이 상대했던 동유럽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서유럽이 동유럽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을 때, 그 지원을 받아 들였던 동유럽은 본질적으로 서유럽과 체제 친화적이었다. 동유럽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막을 내렸고, 동유럽 주민들 역시 서유럽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로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서유럽의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도전과 고민없이 수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대는 이와 다르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매우 고집 세고 완강한 파트너인 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역시 이러한 북한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도전이 크면 그 성과 역시 큰 법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국민 모두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